



# 전주매일



## “피지컬AI, 전북 대전환의 핵심축”

이원택호 미래산업 청사진... 신형식 도지사직 인수위원장, 신 성장전략 제시  
로봇·데이터센터 등 유기적으로 연결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 핵심 과제



신형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이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인수위 활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피지컬 AI는 전북 대전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신형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박승대 재생에너지·피지컬 미래 산업분과위원장과 이정민 인수위 간사 등과 함께 15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인수위 활동 상황 브리핑을 통해 "피지컬 AI는 전북 대전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중심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이 보유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 산업 인프라, 제조업 기반에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면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피지컬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피지컬AI·미래산업 분과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AI로봇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자율 제조 기반의 다크 팩토리, 연구개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원택 당선인도 직접 투자유치 전면에 나선다. 오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전북 피지컬AI 특별위원회 공동 발대식'을 계기로 국내 주요 AI·로봇 기업들을 만나 전북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당선인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광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발대식에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두산로보틱스, IG전자, SK텔레콤, 케이

머, 레인보우로보틱스, NC AI 등 국내 대표 AI·로봇 피지컬 AI 관련 3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 피지컬AI 밸리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7일에는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인수위원과 공무원,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호 KAIST 교수 초청 특별강연이 열린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 교수는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동향과 함께 전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산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신 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철학으로 '체감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통계 수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

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이 가진 자원과 인재, 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외부 투자를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주권지역 조성, 인재 성장지역 구축,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GW 생산과 전북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모든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화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햇빛·바람연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만금 과학단지 조성과 국립 피지컬 AI 연구원, 전북과학기술원(JST) 설립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 인재와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20조 원 규모의 미래 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100개 육성 및 지역 창업기업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운영 원칙으로 도민 주권, 체감 성장, 현장 중심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도민 주권 시대를 열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원회는 재생에너지·피지컬AI·미래산업, 체감 성장, 도민 주권, 글로벌 K, 도민 행복 등 5개 분과와 호남·제주 메가시티, 하계올림픽 유치, 200조 원 규모 AI·반도체 인프라 구축 등 3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금 전북은 지방 소멸과 경제 침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있다"며 "민선 9기 출범을 준비하는 지금이 전북의 생존과 대도약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원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과 언론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시민이 주인 되는 전주 '시민청' 신설 이뤄지나

시민 참여·권한 제도적 보장 핵심 기구  
전주시장직 인수위, 신설 방안 본격 논의  
기존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와 차별화

민선 9기 전주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전주시정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는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핵심 기구인 '시민청' 신설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청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이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 시정혁신분과는 시민청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경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정혁신분과는 '시민주권'과 '기본사회'를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은 기존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와는 차별화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행정과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합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만호 기자

위원회는 시민청을 통해 시민의 삶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정혁신분과는 시민청 신설과 함께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인구정책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생활 인구와 관계인구, 기업 인구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실제 거주 인구뿐 아니라 전주와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까지 도시 성장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전주를 '500만 플랫폼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공직사회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행정업무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운영 체계를 혁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이 축적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시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이는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